

#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이영아 의원)

의안 번호	2340
----------	------

발의년월일 : 2021. 10. 25.

발 의 자 : 이영아, 방미숙, 강성삼,  
이영준, 박진희, 김은영,  
오지훈, 정병용, 김낙주,  
의원

1. 주 문 : 별첨 “건의문”과 같음.

## 2. 제안이유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은 만0~5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 자격을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외국인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초래
- 대한민국은 1991년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
- 이에 하남시의회는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이 보육료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행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3. 송부대상 : 보건복지부

4. 붙 임 : 건의문 전문

##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문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3항은 보육이념에서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 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부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은 독립된 인격체로 보호 및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표방한 것이다.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집행 기준 및 방침을 정하여 배포하는 지침은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구체적인 행정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관련 공무원의 행정행위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차별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등장한다. 지침은 만0~5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 자격을 규정하면서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외국인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은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1991년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지금 국제 사회는 부모의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조차 교육 지원을 소외시키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오늘날 이주노동자, 재외동포, 유학생 등 가족과 함께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가정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아동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우리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을 ‘인권’의 측면이 아닌 ‘혜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이에 하남시의회는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이 보육료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행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즉각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11. 9.

경기도 하남시의회 의원 일동